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음 6월 15일) 제16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내 A 고교, 부정임용 성적조작 '비리 복마전'

서 남대학교 재단인 '홍북학원' 설립자인 이흥하 씨는 지난 1998년 한려대와 광주예술대학교, 서남대 운영에 필요한 공금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신의 병원비, 자녀교육비 등을 유용해 총 400억 원대의 사학비리를 저질렀다가 구속돼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한려대학 재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재학생들에게 80만원에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었다.

하지만 그의 사학비리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12년 12월 감사원과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사 끝에 1,000억원 대의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져 구속 수감된 상황이다.

그런 그가 이전 서남대 의대를 폐교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공분을 얻고 있다.

사학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앞서 투명한 윤리 경영을 해야 함에도 일부 사학 법인은 국가 장래를 짊어질 100년의 교육 사명을 단지 자신들의 입신양명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사학의 비리가 마치 비리의 복마전인 것처럼 매도돼 전체 사학경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물론 내부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 비리에 관련한 논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학이라는 기득권 틀 속 도내 한 곳의 학교에서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비리 복마전이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비리 행태가 일부 교사들의 양심선언과 법적 소송을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해당 학교의 금품채용과 성적조작, 성희롱 논란 등 비리 복마전을 피해 처분다. /편집자 주

심층고발 한 부패 사학 비리 '요지경'

▶ 관련기사 2면

학교 행정실장이 B교사 시험지 고쳐 합격케 해
도교육청에 달미... 벌금 400만원 선고 임용 취소
B교사 부정 임용 관련 서류 일체 무단 폐기도

지난 2012년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양심선언 교사 2명으로부터 교내 비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벌이게 된다. 도교육청이 밝힌 A고등학교가 벌었던 부정 부패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부정 채용, 도교육청에 달미... 임용 취소
B교사의 임용부정에 관해 전 A고 행정실장 C씨가 1차시험에서 B씨의 시험지를 고쳐 부정 임용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2007년 8월 A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B씨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C 행정실장이 B합격을 위해 전공 영어시험 주관식 3점짜리 한 문제를 고쳐 1차 시험(배수 내)에 합격하게 했다.

이어 교원인사위원회 2인에게 사실상 합격을 의미하며 '잘 봐 달라고 B를 부탁해 이후 면접시험과 실증수업 및 학습지도안 평가에서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하게 했다.

관련 인사위원 모 교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응시

자 B씨는 행정실장 C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한 자료 불합격 처리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으로 B씨의 교원 임용시험 합격은 무효"라며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감사담당관은 이에 관한 근거로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을 적용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이 도교육청으로 넘어오는 빌미가 됐다.

▲임용 관련 서류 무단 폐기... 경고
B씨 부정 임용과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도 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부정임용과 관련된 준영구 기록물인 '2007년 교원임용 관련 서류 인 관련 시험지와 답안지 등 임용관련 서류 일체를 무단 폐기했다.

C씨는 '법인감사와 중합합사가 끝났고 보존 문서기록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며 폐기한 것으로 감사결과 적발됐다.

(2면에 계속) /고민형 기자



도로변에 핀 무궁화
순창군이 팔덕면 광암리에서 구립면 월정리까지 8km 구간에 심은 나라꽃 무궁화가 만개하면서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 '옥시' 영국본사 현지조사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국조특위가 오는 8월 영국 현지지를 방문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 조사를 진행한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회동을 갖고 옥시 본사 조사를 합의했다고 지난 15일 국회의장 간사인 송기석 의원이 전했다.

송 의원은 "8월 초 본사로 현지 조사를 갈 예정"이라며 "단순히 본사만 방문하기보다 현지 여론도 파악하고 내각 주요 인사들도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 일정은 위원회 위원이 외교부의 조율을 거쳐 확정한다.

가습기특위는 또 다음달 2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에 법무부를 포함한 부처·산하기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다음달 16일부터 시작한다. 가습기특위는 또 다음달 29~31일 정부와 기업 관계자를 증인 내치 참고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습기특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오전 상임위 보이콧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들은 오는 18일 한차례 더 회동해 잠정 합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진수 기자

▶ 메일 INDEX

3면 전북도, 장애인 정책 안중에 없다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기소

검찰 "당에 쥐야 할 돈을 광고대행업체에 대납 사실상 주도"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



검찰이 15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된 왕주현(52·사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모두 2억1620만원의 광고 관련 대가를 '홍보TF(태스크포스TF)'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쥐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왕 전 부총장은 이 돈을 당시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검찰은 지난달 24일 왕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왕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왕 전 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모두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팀의 선거공보물 제작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팀의 선거공보물 제작에 명목으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 · 문화 · 관광 · 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시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사의 기념관